

POLITICS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3대 특검법 개정안 통과... 수사기간·인력 확대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과반 찬성,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표 1표는 권 의원 본인 표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광양보건대 재정기여자 승인율"

광양시의회, 행정 지원 촉구

광양시의회는 11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 승인 절차 이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광양보건대는 지역 내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지역 경제 위축과 청년층 유출 가속화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부는 신속히 재정기여자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광양보건대는 지난 3월 교육부에 재정기여자 승인 절차를 신청했다. 재정기여자로 지정된 ㈜승산백은 2025년 30억원, 2026년 70억원, 2027년 이후 매년 10억원 이상 지속 투자, 노후 교육시설 개선, 학생 복지시설 확충, 교직원 임금 체불 해소 등을 포함한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으나, 승인 절차 지연으로 대학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양보건대는 교직원 임금 체불, 교육시설 노후화, 지역사회 경기 침체 등 여러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조속한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

민주 광주시당, 정치아카데미

오늘 중흥골드스파리조트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2일부터 13일까지 중흥골드스파리조트 대연회장에서 '2025 정치아카데미 제1기 수료식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1기 정치아카데미 워크숍의 주제는 '광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행사 순서는 1부 성인인지 교육 및 선거법 강의(특강), 2부 정책발표회, 3부 수료식으로 진행된다.

정치아카데미는 지역에서 활동할 참신한 정치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총 8회에 걸쳐 광주정치리더의 과제, 이재명정부의 개혁과제, 광주AI, 미래 자동차와 AI 헬스케어, 민주정부의 역사, 이재명 정부와 2026 광주전략, 지방재정 바로알기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 수료식 및 워크숍에서는 정책발표회를 통해 교육 성과를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키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서로의 정책을 공유·토론하고, 수강생 간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정승기 기자 sky@

여당 주도...국민의힘 퇴장 표결 참여 안 해

최장 90일 연장 가능...1심 재판 방송중계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방)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8명,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순직해방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지난 10일 합의를 파기하고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원안의 수사 기간·인력을 원안대로 강화하고 군 검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조항은 삭제한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에 앞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정보보 불법수사 특검 규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일당독재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된 법에 따라 특검 수사 기간은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방송 중계는 의무적으로 중계되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청년 인구 유출 대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11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청년 인구 유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강문성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전남도의회가 중점적으로 건의한 의제는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3가지다.

김태균 의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대표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남도 청년특구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지방재정 만으로는 청년 창업과 정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타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반면 자신이 속한 지자체 내 선거에 출마할 때는 직을 유지할 수 있어 동일한 선거임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이 규정으로 매 지방선거 때마다 의정 공백이 반복되고 지방의회의

법 개정안에 앞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정보보 불법수사 특검 규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일당독재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된 법에 따라 특검 수사 기간은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방송 중계는 의무적으로 중계되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남농협·농협경제지주,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힘 보탠다

입장권·원에 농산물 구매 약정

전남농협과 농협경제지주가 2025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에 힘을 적극 보탠다.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11일 도청에서 2025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농협은행 전남본부, 농협경제지주와 입장권 구매 및 전남농산물 구매약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류종필 농협은행 전남본부장, 김태완 농협경제지주 전남본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구매약정에 따라 전남농협은 입장권 2억 원을 구매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전남 원에 농산물 1000여원을 구매해 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에선 박람회 기간 운영되는 어린이·직업체험관에서 강진 녹향월촌마을 등 7개 팍스테이마을과 함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농촌체험관광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원원 경제부지사는 "이번 구매약정은 박람회 개최를 위한 든든한 후원이자 전남 농업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3대 특검법(3대 특검법 개정안)' 중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한 민주당 내 비판이 확산하자 정청대 대표는 지난 10일 저녁 재협상을 원내 지도부에 지시했고, 김건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은 결

렬됐다"며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 조항 삭제는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법사위와 당내 3대 특검 대응 특위 소속 의원들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지만, 윤석열 의원 등은 특검의 지휘권을 위한 조항 삭제가 있다며 조항 삭제를 제안했고, 이를 지도부가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법사위와 당내 3대 특검 대응 특위 소속 의원들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지만, 윤석열 의원 등은 특검의 지휘권을 위한 조항 삭제가 있다며 조항 삭제를 제안했고, 이를 지도부가 받아들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자립준비청년 통합 주거복지 모델 구축

도, 전남개발공사·광주은행·자립지원기관과 협약

전남도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출로 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국 최초의 통합 주거복지 모델을 구축했다.

전남도는 1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개발공사, 광주은행, 전남자립지원재단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중훈 광주은행 부행장, 문성운 전남자립지원기관 관장이 참석해 협력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남지역 자립준비청년은 403명에 달한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전남개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해 최대 6년간 월 1만 원의 임대료를 거주를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입주 청년 1인당 약 1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과 소형

가전 구입비를 후원하며, 전남자립지원재단은 후원금 관리와 자립정보 제공, 경제교육·상담 등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주거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열여덟 어린이라 불리는 자립준비청년은 이른 나이에 출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따뜻한 동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하겠다"며 "협약 기간과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 외에도 '청년들 잘지내!' 사업을 통해 사회·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시민참여예산 사업 시민이 결정

14일까지 '시민광장 광주 온(on)'서 온라인 투표

광주시는 1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시민광장 광주온(ON)'에서 2026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등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 대상은 시민 제안사업 중 보행 안전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분야 4건, 조형어린이공원 공간 개선 등 도시재생분야 8건, 복지장에 인 삶의 질 증진 클리닉 등 복지분야 2건, 등산숲길 정비사업 등 환경분야 3건, 중외근린공원 운암계 구간철제 난간 설치 문화관광분야 1건, 집수리전문가 양성 일자리분야 1건, 마을교차로 안전강화대책 일반행정분야 1건 등 총 21건이다.

아울러 2024년도에 완료한 사업 중 우수사업도 선정한다. 우수사업 후보는 가로수 열매 처리, 학원밀집지역에 어린이 보호가드레일 설치, 무장애 통학로 조성, 최종중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확대 지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 등 5개 사업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사업을 선택하고, 동시에 2024년도 완료사업 중 1건을 우수사업으로 뽑으면 된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3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시민 제안 공모를 통해 총 91건(223억원)의 사업을 접수받았다. 이후 사업부서 검토와 참여예산위원회 회의·심사과정을 거쳐 총 21건(33억원)을 투표 대상으로 확정했다.

최종 사업은 온라인 투표 결과와 시민 참여예산위원회 의결,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참여예산 투표는 예산 편성 전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